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소방재난본부 여의도수난구조대 현장점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2회 임시회 중인 9월 8일(월) 여의도 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수난사고 대비 현황과 구조 활

동 실태를 점검하고, 각 구조대의 관할 구역, 장비 운영 현황, 연도별 구조 활동 통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119특수구조단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수난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동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동길 위원장은 “최근 구조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며, 이는 무엇보다 현장 대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구조 활동은 물론 예방 교육과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차단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는 지난 1995년 7월 수난구조업무를 시작한 이후 여의도(1997.5.9.), 독섬(1998.11.18.), 반포(2014.4.17.), 광나루(2020.7.14) 등 4곳에 수난구조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대응 체계를 확대해왔으며, 현재는 총 76명의 대원이 배치돼 수난 인명 구조는 물론, 수변 순찰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강동길(성북3)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박철성(구로4) 부위원장, 김혜지(강동1) 남창진(송파2), 박성연(광진2), 이은립(도봉4), 봉양순(노원3), 성혜제(은평1)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립대학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대, 송파3·국민의힘)는 9월 8일(월), 서울시와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공공의료 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의료 인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을 제안한 이승복 부위원장(양천4,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과업 등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개 시립병원의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립대에 의대

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립대는 지방행정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물론 서울시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할을 수행해 온 국내 유일의 4년제 국립대학교로서 지역별 보건 의료정책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이라며,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기회균등 정책을 도입하고 서울의료원 및 각 시·도별 지방의료원과 연계하면, 서울-지방 간 상생을 통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용이해지고 체계적인 지역공공의료 인재의 양성이 가능해진다”고 건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만옥 부위원장(성동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두 서울시립대 의대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만장일치로 이번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9월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시와 국회, 정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장성 기자

인천시의회,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위원장실에서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사)전국아파트임주자대표회의의 인천시지부 이선중 지부장(회장)

및 성낙신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인천시지부 측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 설립 추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확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함에도 인천시는 정부 기본안 외에 소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인천

시민 대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제안에 주신 공동주택지원팀 신설, 전기차 화재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종혁 의원은 “임주자대표회의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공동주택 현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심하린 기자

경기도의회, 베트남 난민성 인민의회 대표단과 협력 논의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베트남 난민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나 양국의 우호협력과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이번 방문은 지난 2017년 체결된 경기도의회와 하남성 인민의회 간 친선 교류 합의 이후 꾸준히 이어온 상호 교류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지난 7월 하남성·남딘성·난민성 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난민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처음으로 도의회를 찾은 것이다.

난민성 인민의회 대표단은 이날 여담채에서 이뤄진 의장 공식 접견을 통해 양 지역 의회의 교류 현황과 향후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경기도 경제 발전 전략과 교통 정책, 스마트 교통 시스템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

였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제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한 난민성 인민의회와의 만남은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외교를 더욱 확장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베트남 하남성과 2017년 첫 교류를 시작해 올해 8주년을 맞았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역사가 난민성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레 꾸옥 켄 난민성 인민의회 의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난민성과 경기도의회 간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양 지역은 물론 양국 간 관계 발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송민수 기자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최초 실시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지난 4일 개최한 제256회 임시회 일정 가운데 8일과 9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는 평택시의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지적과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최초로 조치결과 보고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조치결과 보고는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61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전희경 충남연구원의 직무 대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추진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행정통합은 단순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충남 15개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와 주민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가능하지만, 현재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4일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

책설명회에서도 구체적 법률안 논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행정통합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정치권 내에서도 ‘충청권 광역통합’, ‘충남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통합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전희경 충남연구원의 정치활동 논란을 정면으로 다뤘다. 그는 “전 원장이 임명 당시 국민의힘 의정부감 당협위원직을 겸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도지사는 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 직책을 맡고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의 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도 출연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체 수입은 감소하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연구원장이 타 지역에서 정당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도지사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인사권자로서 도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냐”고 따져 물었다.

이현진 기자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